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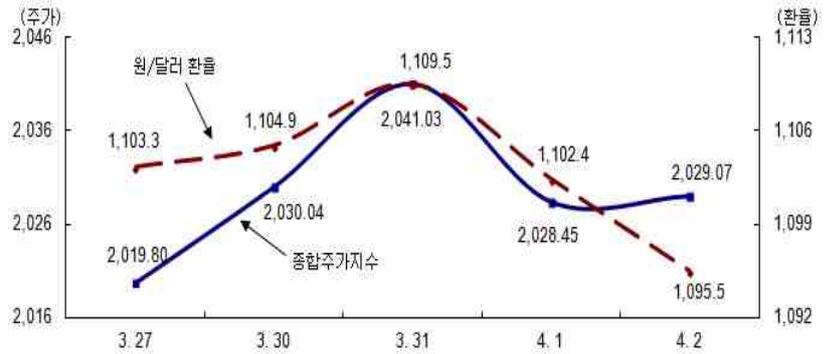
#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 스텔스 보호무역(Stealth Protectionism) 장벽을 넘어야 한다

週間 主要 經濟 指標 (3.27~4.2)

Better than  
the Best!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	1
□ 스텔스 보호무역(Stealth Protectionism) 장벽을 넘어야 한다	.....	1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12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괄        :   한 상 완   경제연구본부장 (2072-6230, swan@hri.co.kr)  
 □ 경제연구본부    :   조 호 정   연구위원 (2072-6217, chjss@hri.co.kr)

## Executive Summary

### □ 스텔스 보호무역(Stealth Protectionism) 장벽을 넘어야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하락하던 관세율이 상승 전환되고 반덤핑·상계관세 등 무역구제 발동 증가, 비관세 장벽 확대 등 보호무역은 계속 강화되고 있다. 이는 국내 수출 증가율 하락에도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전세계 무역 조치를 포괄적으로 감시하는 GTA(Global Trade Alert) 자료를 활용하여 최근 보호무역의 특징과 우리 경제에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 ■ 최근 세계 보호무역의 특징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첫째, 보호무역 조치가 약 7배 증가했다.** GTA에 따르면, 무역 자유화 또는 무역 제한과 관련된 무역 조치는 2009년 633건에서 2014년 5,847건으로 증가했다. 이중 무역 상대국에 명백한 피해를 주거나 피해를 중 개연성이 높은 보호무역 조치(GTA 기준, 황·적색 조치가 해당)가 2014년말 4,521건으로 약 3/4를 차지하고 2009년 이후 약 7배 증가했다.

**둘째, 브릭스, 미국 등에서 보호무역 조치가 가장 많이 늘었고 지역경제블록 차원의 공동규제 도입도 증가했다.** 보호무역 조치 도입 상위 7개국을 보면, 인도가 422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358건, 러시아 328건 순이다. 중국도 170건으로 6위에 올랐지만 한국은 67건에 불과했다. 한편, EU, 유라시아 관세동맹, 남미공동시장은 공동 시장 보호를 위해 2009년 이후 각각 161건, 82건, 19건의 규제를 공동으로 도입했다.

**셋째, 무역구제 등 전통적 장벽이 가장 많지만 비전통적 장벽도 급증했다.** 유형별 보호무역 조치를 보면, WTO가 인정하는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의 무역구제 조치가 1,448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브라질, 인도가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미국은 2009년 이후 101건의 반덤핑 조사와 62건의 상계관세 조사를 발동했다. 그러나 무역구제 이외에도 규제금융 865건, 국산부품사용 302건 등 비전통적 장벽 도입도 급증했다.

**넷째, 중국, 미국, EU 선진 국가가 보호무역 조치의 표적이 되고 있고 화학, 금속, 농산물, 기계가 주요 표적 산업이다.** 중국은 총 2,103건의 보호무역 조치의 표적이 되고 있고 미국 1,441건, 독일도 1,269건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편, 한국도 1,084건으로 주요 표적국 상위 7위에 올랐다. 산업별로는 기초 화학이 519건, 기초 금속 498건, 농·원예제품 445건 순으로 보호무역 조치의 주요 표적 산업이 되고 있다.

#### ■ 보호무역 확대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 보호무역 조치 도입에는 소극적이거나 주요 표적국이 되는 만큼 **우선, 수출 둔화가 지속될 수 있다.** 한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도입된 전세계 보호무역 조치 1/4의 표적이며 반덤핑 피소도 85건으로 중국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했다. WTO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 수입액의 약 4.1%가 수입제한조치 규제를 받았다. 한국도 2014년 상반기 기준 수입제한조치를 받은 수출액이 약 120억 달러에 달해 이들 품목의 수출 감소가 우려된다. 실제로 2011~13년까지 반덤핑 등 규제를 받은 품목의 수출은 약 30% 급감했다. 더욱이 인증, 환경 규제 등 비관세 장벽도 수출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보호무역 확대는 이를 회피하**

**기 위한 제조업의 해외투자 유출로도 연결된다.** 한국의 해외투자 중 '보호무역 타개'목적은 2009년 이후 연간 6,000만 달러로 작지만 투자건수는 2012년 이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이 '보호무역 타개'를 위한 해외투자의 약 92%를 차지했는데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과 통신 장비,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 부문의 해외투자 유출이 가장 컸다. **다음으로 국내 주력산업의 시장 확대도 제약되고 있다.** 한국의 산업별 무역구제 피소 건수를 보면, 철강·금속이 59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학 21건, 섬유 21건, 전기·전자 6건 순이다. 이들 산업은 수출 감소, 신규 계약 포기 등 수출 시장 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또한, 중국 등 주요 수출국에서 도입된 비관세 장벽들도 국내 주력 수출 품목에 집중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수익성도 악화시킨다.** 한국 기업에 대한 지적재산권 침해 분쟁이 심화되면서 국내 기업이 피소되는 국제 특허소송은 2009년 154건에서 2013년 342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이로 인한 막대한 소송비용뿐만 아니라 제품 수출을 위한 원산지 규정, 인증, 환경 규제 등 제도적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비용 확대도 기업의 수익성을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다.

< 종류/연도별 무역 조치 도입 추이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GTA 자료 활용 계산).  
주 : 보호무역 조치는 황·적색 조치의 합임.

< 보호무역 조치의 상위 7개 표적국 >



자료 : GTA.  
주 : 적색 및 황색조치 합계로, 2014년말 기준임.

## ■ 시사점

세계 경제회복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아 2015년에도 보호무역 강화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정부와 기업 차원의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정부 차원에서는 첫째,** 계속 늘어나는 보호무역 조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보호무역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FTA 활용도를 제고해야 한다. **셋째,** 보호주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국제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 **넷째,** 개별 기업들이 무역규제에 대응하기는 어려운 만큼 맞춤형 정보와 컨설팅 제공을 확대해야 한다. **기업 차원에서도 다섯째,** 관련 기업 간 네트워크 강화 등으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 수집과 대처 방안 마련해 나가야 한다. **여섯째,** 현지 파트너십을 통한 우회 진출 등 다양한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 **일곱째,** 보호무역 강화를 가격 대비 품질 경쟁력을 제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 1. 개요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 국은 수출 촉진 등을 위해 보호무역을 강화

- 보호무역<sup>1)</sup>은 수출 촉진, 자국산업 보호 등을 위해 활용되어 왔음

- 보호무역규제는 WTO가 허용하는 관세, 무역구제(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 등 전통적 장벽과 구제금융, 투자 조치, TBT(기술적 장벽) 등 비전통적 장벽으로 구분
- 한편, WTO, UNCTAD 및 GTA(Global Trade Alert) 등에서 모니터링되고 있음

- 최근 전세계 관세율이 상승 전환되고 무역구제조치 증가 등 강화된 보호 무역은 국내 수출 증가율 하락에 직·간접적 영향이 확대

- WTO체제 이후 하락했던 전세계 실행관세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0년 5.77%에서 2013년 6.19%로 소폭 상승 전환됐고, G20 국가의 무역제한조치도 2010년 11월 381건에서 2014년 10월 1,244건으로 2배 이상 증가
- 한편, 보호무역 강화 등으로 국내 수출 증가율은 2012년 -1.3%에 이어 2013~2014년 2% 초반 대에 그쳤고 2015년 1분기에도 전년동기대비 -2.8% 기록

○ 이에 전세계 무역 조치를 포괄적으로 감시하는 GTA자료를 활용하여 최근 보호무역 규제의 특징과 우리 경제에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함

< 보호무역 조치의 구분 >

		UNCTAD	ADB
관세		- 관세	전통적 장벽
	무역구제	- 반덤핑·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비관세장벽	가격 조치	- 관세 및 유사관세 · 가격통제조치	비전통적 장벽
	비가격 조치	- 금융조치 · 수량제한·반독점 조치	
	기술 조치	- 위생 및 검역(SPS) · 기술장벽(TBT) 외	
	제도적 조치	- 무역관련 투자조치 · 비수출 관련 보조금 · 정부조달 제한 · 원산지규정 · 지적재산권 외	

< G20 국가의 무역제한조치 건수와 국내 수출증가율 추이 >



자료 : UNCTAD, ADB 구분을 참고하여 재정리.

자료 : WTO, 산업통상부 보도자료

1) 보호무역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국제무역을 제한하는 것으로 수입품 가격 인상, 소비자 후생 감소로 연결되고 전세계 교역규모 감소, 자국 산업의 경쟁력 하락 등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음.

## 2. 최근 세계 보호무역의 특징

○ (총규모) 전세계 보호무역 조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약 7배 증가했는데 2013년 이후 증가폭이 재차 확대

- GTA는 전세계 무역 조치를 녹·황·적색의 3가지 구분하는데 이 중 황·적색이 무역 상대국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보호무역 조치에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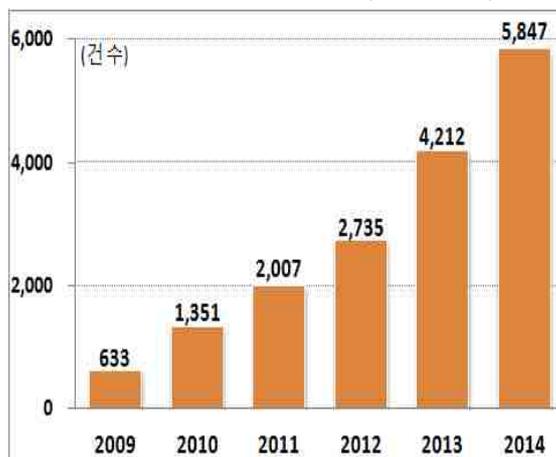
· GTA(Global Trade Alert)는 전세계에서 발표한 무역 조치를 녹·황·적색으로 구분하며 녹색은 무역 자유화, 황·적색(2)은 무역 상대국의 상업적 이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보호무역규제에 해당

- 전세계 무역 조치 중 무역 상대국에 피해를 주는 보호무역 조치가 3/4를 차지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약 7배 증가

· GTA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무역 자유화 또는 제한하는 무역 조치는 2009년 633건에서 2014년말 5,847건(누적)으로 늘어남. 이 중 보호무역 조치는 4,521건으로 3/4를 차지하고 2009년 대비 7배 증가

· 보호무역 조치는 무역 상대국의 제품 또는 상업적 이익에 명백한 피해를 주는 적색 조치가 2009년 422건에서 2014년말 3,420건(누적)으로 늘었고, 상대국에 피해를 줄 개연성이 높은 황색 조치도 동기간 143건에서 1,101건으로 증가

< 전세계 무역 조치 추이(누적규모)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GTA 자료 활용 계산).  
주 : 보호무역 조치는 황·적색 조치의 합임.

< 종류/연도별 무역 조치 도입 추이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GTA 자료 활용 계산).  
주 : 보호무역 조치는 황·적색 조치의 합임.

2) GTA는 무역조치의 강도에 따라 적색은 기시행된 외국 제품 및 상업적 이익을 명백히 차별하는 조치이며, 황색은 기시행된 외국 제품 및 상업적 이익을 차별할 것이 확실시 되는 조치를 가리킴.

○ (주요 도입 주체) 브릭스, 미국 등에서 보호무역 조치를 가장 많이 늘었고 EU 등 지역경제블록들의 공동 조치 도입도 증가

- 브릭스와 미국이 보호무역에 가장 적극적이거나 비 G20 국가들도 보호무역 조치 도입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국가별 보호무역 조치 도입(황·적색 조치의 합) 상위 7개국을 보면, 2014년 말 기준 인도가 422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358건, 러시아가 328건 순임
- 중국도 자국 기업에 대한 반덤핑 조사 등이 늘어나면서 보호무역을 강화하며 2014년말 기준 170건으로 세계 6위에 올랐음. 반면, 한국은 67건에 불과
- 한편, 2014년말 기준 전체 보호무역 조치 4,521건 중 G20 국가가 2,874건으로 63.6%를 차지했지만 비 G20 국가들의 연도별 규제 도입건수도 2011년 179건에서 2013년 447건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음

- EU, 유라시아 관세동맹<sup>3)</sup>, 남미공동시장 등 주요 지역경제블록들도 공동 시장 보호를 위한 보호무역 조치를 공동으로 도입

- 지역경제블록 중에서는 EU가 보호무역 조치 도입에 가장 적극적임
- 2009년 이후 EU가 공동시장 보호를 위해 161개의 보호무역 조치를 도입했고 유라시아 관세동맹 82건, 남미공동시장도 19건의 조치를 취하였음

< 보호무역 조치 도입 상위 7개국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GTA 자료 활용 계산).  
주 : 황·적색 조치의 2014년말 누적이며, 공동 도입 된 조치는 제외됨.

< 지역경제블록 무역 조치 건수(누적) >

(단위: 건 수)

구분	국가	총	
		무역 조치	보호무역 조치
EU	독일 프랑스 등 27개 회원국	204	161
유라시아 관세동맹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156	82
남미공동 시장 (Mercosur)	아르헨티나, 우르과이, 파라과이, 베네주엘라	35	19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GTA 자료 활용 계산).  
주 : 보호무역 조치는 황·적색 조치의 합으로, 2014년 말 누적임.

3) 유라시아 관세동맹은 2012년 2월 설립됐고 2015년 1월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 전환.

○ (규제 유형) 무역구제조치, 관세 등 전통적 무역 장벽이 많지만 규제금융, 국산부품사용, 투자 조치 등 비전통적 장벽 도입도 빠르게 증가

- 보호무역 조치는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의 무역구제<sup>4)</sup>와 규제금융, 관세 순으로 많았음

- 보호무역 조치 중 WTO가 인정하는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의 무역구제가 2014년말 1,448건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음
- 무역구제 이외에는 관세 조치 663건, 수출세 및 제한 243건 등 전통적 장벽들이 주로 도입됐고 규제금융 865건, 국산부품사용 302건, 투자 조치 256건, 공공조달 183건 등 비전통적 장벽들도 상위 7가지 중 4개를 차지함

- 미국, 브라질, 인도 등이 무역위축 효과가 큰 반덤핑 조사 등 무역구제조치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WTO를 통한 반덤핑 조사 개시는 1,156건 이뤄졌고, 상계관세와 세이프가드도 각각 138건, 122건 발동됨
- 보호무역 조치 도입이 활발했던 브라질, 인도, 미국이 반덤핑 조사 개시 건수도 가장 많았음. 한편, 상계관세는 미국, EU 등 선진국이 세이프가드는 인도, 인도네시아 등 신흥국들이 주로 발동하고 있음

< 유형별 무역구제 상위 7가지 >



자료 : GTA.  
주 : 유형별 적색, 황색 조치의 합이며, 2014년말 기준임.

< WTO 무역구제조치 발동 국가 순위 >

순위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국가	건수	국가	건수	국가	건수
1	브라질	192	미국	62	인도	23
2	인도	154	EU	25	인도네시아	21
3	미국	101	캐나다	17	우크라이나	8
4	아르헨티나	84	호주	9	이집트	7
5	호주	77	중국	7	터키	6
	합계	1,156	합계	138	합계	122

자료 : WTO.  
주 : 1) 2009 ~ 2014년 6월까지 누적이며 보고국가(Reporting country) 기준임.  
2) 세이프가드 발동은 2014년말 기준.

4) 각 국은 수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고자 GATT 체제 때부터 GATT 1947 제 VI조 및 제 XIX조를 비롯하여 WTO 협정 부속서 1A 중 GATT 1994 제 VI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인 반덤핑(AD: Anti-dumping) 관세,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인 상계관세(CVD: Countervailing Duty), 세이프가드(SG: Safeguard)의 무역구제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규제 대상) 중국, 미국, EU 선진 국가들이 보호무역 조치의 표적이 되고 있으며 화학, 금속, 농산물, 기계가 주요 표적 산업임

- 보호무역 조치의 표적은 수출 경쟁력이 높은 중국, 미국, EU 선진 국가들 이나 한국도 7위를 기록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 제품 및 상업적 이익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보호무역 조치가 2,103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1,441건, 독일도 1,269 건의 보호무역 조치의 표적이 되고 있음

· 한편, G7 국가와 세계 최대 무역국인 중국을 제외하면 한국만이 1,084 건의 보호무역 조치의 대상이 되어 상위 7개국에 포함됨

- 산업별로는 화학과 금속, 농산물, 기계 부문에 대한 보호무역 조치가 가장 많이 도입

· 보호무역 조치의 표적이 된 산업 섹터는 기초 화학이 519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초 금속 498건, 농·원예제품 445건, 특별목적 기계 399건의 순임

· 이에 전세계 국가들은 자국의 화학, 금속, 농산물 및 기계 산업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판단됨. 한편, WTO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에 서도 철강, 석유화학, 플라스틱 등이 주요 표적이 되고 있음

< 보호무역 조치의 상위 7개 표적국 >



자료 : GTA.  
주 : 적색 및 황색조치 합계로, 2014년말 기준임.

< 보호무역 조치의 상위 7개 표적 산업 >



자료 : GTA.  
주 : 적색 및 황색조치 합계로, 2014년말 기준임.

### 3. 보호무역 확대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수출 둔화) 한국은 보호무역 조치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어 수출 둔화가 지속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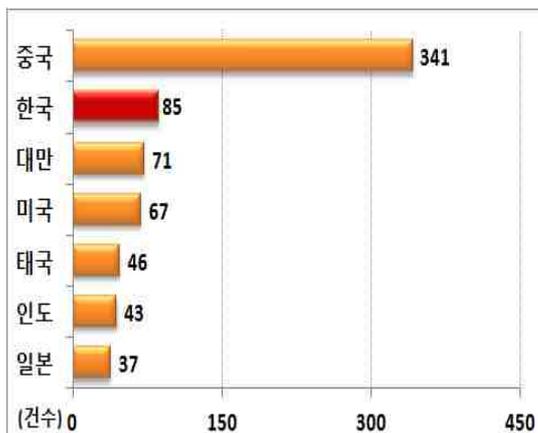
- 한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도입된 전세계 보호무역 조치 14의 표적이 되며 반덤핑 피소도 중국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

- 한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도입된 4,521건의 보호무역 조치 중 1,084개의 표적이 되어 중국, 미국, 독일 등에 이어 상위 7개국에 포함
- 특히, 한국은 2009년 ~2014년 6월말까지 총 85건의 반덤핑 제소를 당해 중국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했고 상계관세도 6건이 개시됨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입제한조치를 당한 전세계 수입액은 4.1%에 달했고 한국도 반덤핑 관세 등이 부과된 품목의 수출은 약 30% 급감

- WTO에 따르면, 2008년 10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수입제한조치를 당한 전세계 수입액은 약 7,570억 달러로 전체 수입액의 4.1%에 달함<sup>5)</sup>
- 한국의 반덤핑·상계관세 및 세이프가드 규제하의 수출액은 2014년 상반기 기준 약 120억 달러임. 반덤핑·상계관세 및 세이프가드 규제를 받은 품목의 수출은 2011년 110억 달러에서 2013년 76.2억 달러로 약 30%<sup>6)</sup> 감소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반덤핑 피소 상위 7개국('09~'14.6) >



자료 : WTO.

< 한국의 반덤핑·상계관세 및 세이프가드 규제 품목의 수출 추이 >



자료 : 2014년 對한국 수입규제 총람.

5) 또한, ADB(아시아개발은행)은 2009년 5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월별 수출 확대와 무역 상대국의 피해를 입히는 적색 조치가 -0.28로 음의 상관관계(5% 유의수준)를 갖는다고 분석함.

6) 2011~2013년까지 수출 최고액 기준임.

○ (투자 유출) 보호무역 확대는 이를 회피하기 위한 제조업의 해외투자 유출로 연결되고 있음

- '보호무역 타개'만을 목적으로 한 해외투자 유출이 지속되고 있고 투자건수는 2012년 이후 증가세

- 해외투자(신고금액 기준)를 목적별로 구분해 보면, 보호무역 회피를 목적으로 한 투자는 2007년 이후 2014년까지 약 7.3억 달러 유출됨
- '보호무역 타개'를 위한 해외투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감소세를 보이거나 연간 평균 6,000만 달러가 유출되고 투자건수는 2012년 이후 증가세
- 한편, 해외투자 중 관세 회피, 수출 시장 확대 등 보호무역규제 확대에 의한 직·간접적 영향까지 고려한 광의의 수출관련 해외투자는 2009년 164억 달러에서 2014년 284억 달러로 급증

- '보호무역 타개' 목적의 해외투자는 전자, 기계, 섬유 등 제조업에 집중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호무역 타개'를 위한 해외투자(2007~2014년 누적)는 제조업 부문이 전체의 95.2%를 차지
- 제조업 부문(중분류 기준)별로 보면,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이 1.6억 달러, 54건의 해외투자를 신고하였고,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도 1.3억 달러, 36건에 달했음

< '보호무역 타개' 목적의 해외투자 추이 >



자료 : 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 상위 7개 산업의 '보호무역 타개' 해외투자 규모( '07~' 14년 누적) >

(단위: 백만 달러, 건)

산업 구분	금액	건수
1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	164.6	54
2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	125.5	36
3 섬유제품 제조, 의복제조	94.0	15
4 1차 금속 제조	82.0	9
5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	77.3	39
6 전기장비 제조	44.3	5
7 펄프·종이·종이제품	43.3	6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수출입은행 해외투자 통계).  
주 : 산업 중분류이며 신고 기준임.

○ (국내 주력산업의 시장 확대 제약) 반덤핑 조사 등 무역구제 피소가 철강, 화학, 자동차 등 국내 주력산업에 집중되면서 수출 장벽이 확대

- 한국이 반덤핑·상계관세 등 무역구제 피소를 당한 산업은 철강, 화학 등 주력 산업<sup>7)</sup>이 대부분으로 수출 감소, 신규 계약 포기<sup>8)</sup> 등으로도 연결

· 한국은 2015년 1월 현재 인도, 중국, 미국 등 26개국에서 166건(규제중 126건, 조사중 40건) 무역구제 피소를 당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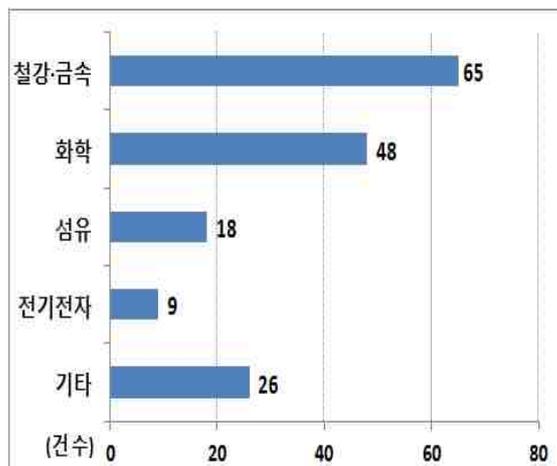
· 산업별로 보면, 철강금속이 65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학 48건, 섬유 18건, 전기전자 9건순임. 한편, 철강금속, 화학은 국내 주력산업으로 피소 이후 수출 감소, 신규 계약 포기 등으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됨

- 또한, 자동차, IT 제품 등도 관세 인상, 지적재산권 분쟁 확대, 국산부품사용, 표준 강화 등 비관세 장벽의 표적이 되고 있음

· 국내 주력 수출제품들은 중국, 미국 등 주요 수출국에서 수입허가증 발급 지연, 인증제도, 정부조달참여 제한 등 다양한 기술적 장벽에 대상

· 특히, 자동차의 경우 기술규격승인(터키), 사치세 부과(인도네시아), 수입허가제(베트남·말레이시아) 규제를 당하고 있고, IT 제품도 에너지효율규제(미국), 수입 규제(인도네시아) 등으로 수출 확대가 제약

< 한국 산업별 무역구제 피소 건수 >



자료 : 한국무역협회, 비관세장벽 포탈 '2015년 1월 對韓수입규제 월간 동향.'

< 국내 주력 산업별 보호무역조치 >

산업	사례
철강	-(미국) 유정용 강판에 반덤핑 관세 부과 -(EU) 방향성 전기 강판 반덤핑 조사 -(중국) 철강 산업 보조금 외
자동차	-(터키) 기술규격승인(TSE) 인증 요구 -(인도네시아) 사치세 부과 -(베트남·말레이시아) 수입허가제 -(EU·인도) 타이어 관련 인증마크 외
IT	-(미국) 충전기 등에 에너지효율 규제 -(인도네시아) 핸드폰, 태블릿 PC 수입 규제 -(중국) 리튬이온전지 안전기준 외
전기 전자	-(EU) 폐전기전자제품 처리 지침 개정 -(미국) LED램프 시험 기준 외

자료 : 산업통상부 외, '2014 외국의 통상환경' 정리.

7) 2013년 체소된 34건의 대상 품목은 HS 6단위 기준 74개이며, 이 중 20개 품목이 세계수출시장 점유율 1~3위 (2012년 기준)를 차지한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들임. 국제무역연구원, '경고등 켜진 對한국 수입규제', 2014.2.

8) 대한상의가 2013년말 수출기업 897개사를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4.2%인 38개 기업이 수출 대상국의 보호무역규제의 강화로 신규계약을 포기한 적이 있었음.

○ (기업 수익성 악화) 반덤핑 제소, 지적재산권 등 국제 분쟁과 인증, 환경 규제 등 제도적 조치에 대응한 비용 상승 등은 기업 수익성을 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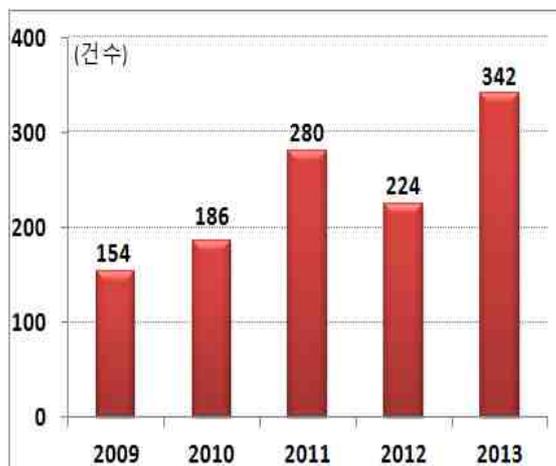
- 한국 기업에 대한 지적재산권 침해 분쟁이 심화되면서 국내 기업이 피소 되는 국제특허 소송은 2배 이상 증가

- 지적재산권에 대한 규제는 법적절차를 통해 침해 물품에 대한 강력한 권한행사가 가능하여 규제 도입이 증가하고 있는데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의 한국 기업에 대한 지적재산권 침해 분쟁이 증가
- 이에 국내 기업들의 국제 특허소송 건수는 2009년 154건에서 2013년 342건으로 2배 이상 증가. 특히 2013년 기준 4건을 제외하고는 우리 기업들이 모두 피소 당하였음

- 국제 소송비용 이외에도 제품 수출시 인증, 환경 규제 등 제도적 조치에 대응한 비용도 늘어나 기업 수익성 악화로 연결

- 국제 특허소송은 평균 2~3년의 시간이 소요되고 막대한 소송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손실 발생도 2000년대 초반 평균 1백만 달러에서 2000년대 후반 평균 3백만 달러 이상으로 증가<sup>9)</sup>
- 또한, 제품 수출시 각 국가마다 다른 원산지 규정, 기술적 무역장벽(건강·안전, 환경, 표준)에 대응하기 위한 수출기업의 비용도 크게 증가

< 국제특허 소송 건수 추이 >



자료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 WTO에 신규 통보된 기술무역장벽 (Technical barrier to trade) 추이 >



자료 : WTO Secretariat.

9) U.S. New & world Report, 2002; Managing Intellectual property, 2009.

#### 4. 시사점

- 세계경제 회복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아 2015년에도 보호무역 강화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정부와 기업 차원의 대응 방안 마련이 요구됨
  - 특히, 한국은 보호무역규제 도입에는 소극적이나 주요 표적국이 되는 만큼 수출 경쟁력 약화, 분쟁 증가 등을 적극적으로 방어해 나가야 함
- 정부는 보호무역규제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FTA 활용도 제고, 보호주의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 강화 및 수출 기업에 대한 관련 컨설팅 제공 확대 등에 노력
  - 첫째, 정부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보호무역 조치에 대한 모니터링은 강화해야 한다.
    - 세계 경기 침체와 환율 전쟁 격화 등이 수출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이로 인해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숨겨진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무역규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둘째, 보호무역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FTA 활용도를 제고해야 한다.
    - FTA가 모든 보호무역주의를 억제할 수는 없지만 FTA 체결은 관세 하락, FTA 체결국과의 무역구제위원회 설치 등 보호무역의 피해를 줄여 나갈 수 있는 만큼 기업의 활용 방안을 제고해 나가야 함
    - 특히, 유라시아 관세동맹, 남미공동시장 등 국가 차원 및 지역경제블록 차원의 공동 무역규제 확산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됨
  - 셋째, 보호주의 확산을 방어하기 위한 실질적인 국제 공조도 강화해야 한다.
    - 한국은 보호무역규제의 도입에는 소극적이나 주요 표적이 되는 만큼 WTO, G20 정상회의 등을 통해 보호주의 확산 방지 합의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실질적 공조를 강화해야 함
    - 특히, WTO 규정에 어긋나는 비관세 장벽, 수입규제 및 투자 장벽 등의 보호무역 조치들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호무역 도입에 있어 국제사회 차원의 강제력 있는 규범 도입을 논의할 필요도 있음

- 넷째, 국내 수출 기업이 개별적으로 보호무역규제에 대응하기는 어려운 만큼 공공 차원에서 맞춤형 정보 및 컨설팅 제공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 정부가 보호무역에 대한 정보 제공 인프라(Tradenavi 등)를 구축하고 있는 만큼 기업 활용도를 제고해 나가야 함
  - 또한, 기업들이 보호무역이 강화된 지역, 보호무역 조치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보 및 컨설팅 지원도 확대해야 함
- 기업들도 기업 간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정보 교환, 해외 파트너십을 통한 우회 진출 등 수출 전략 마련, 제품 고도화 등의 노력이 필요
- 다섯째, 기업 스스로도 관련 기업 간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보호무역 조치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 수집과 대처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 국내 수출 기업의 약 70%는 보호무역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는 만큼 관련 기업 간 네트워크 강화가 필수적임
  - 특히, 기술규제나 지적재산권을 통한 분쟁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는 세계적 동향에 대해 미리 체크하고 대응하는 자세도 필요
- 여섯째, 반덤핑 관세 등 무역규제에 벗어날 수 있는 현지 파트너십을 통한 우회진출 등 수출 전략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 미국, 유럽, 남미 국가에서 자국산 우대, 지역생산 비율 확대 등의 보호 무역주의로 완제품 수출이 어려움이 많아지고 있어, 현지 업체와의 기술적 제휴, 파트너십을 통해 우회진출 시도가 필요함
- 일곱째, 보호무역 강화를 가격 대비 품질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 수입업자와의 신뢰 증진 노력, A/S 강화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소비자를 확보하는 동시에 꾸준한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 등으로 품질 경쟁력을 꾸준히 높여 나가야 할 것임

경제연구본부 조호정 연구위원(chjss@hri.co.kr, 02-2072-6217)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주요국 성장률 추이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미국	2.2	2.7	1.8	4.5	3.5	2.4	-2.1	4.6	5.0	2.6	3.6
유로 지역	-0.4	-0.2	0.3	0.1	0.3	0.8	0.3	0.1	0.2	-	1.2
일본	1.5	1.5	0.7	0.4	-0.4	0.1	1.4	-1.7	-0.5	-	0.6
중국	7.7	7.7	7.5	7.8	7.7	7.4	7.4	7.5	7.3	7.3	6.8

주 : 1) 2015년 전망치\*는 IMF 2015년 1월 전망 기준.

2) 미국은 전기대비 연율, 유로 지역과 일본은 전기대비, 중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2013년말	2014년		2015년		전주비	
		6월말	12월말	3월 26일	4월 2일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3.03	2.53	2.22	1.99	1.91	-0.08 %p
	엔/달러	105.04	101.44	119.46	119.48	119.50	0.2 ¥
	달러/유로	1.3799	1.3645	1.2159	1.0968	1.0780	-0.0188 \$
	다우존스지수(p)	16,577	16,827	17,823	17,678	17,763	85 p
	닛케이지수(p)	16,291	15,162	17,451	19,471	19,313	-158 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2.86	2.68	2.10	1.78	1.72	-0.06 %p
	원/달러(원)	1,055.4	1,011.8	1,099.3	1,108.0	1,095.5	-12.5 원
	코스피지수(p)	2,011.3	2,002.2	1,915.6	2,022.6	2,029.1	6.5 p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2013년말	2014년		2015년		전주비	
		6월말	12월말	3월 26일	4월 2일		
국제 유가	WTI	98.55	105.37	53.27	51.43	49.14	-2.3 \$
	Dubai	107.88	109.29	53.60	53.99	54.63	0.6 \$
CRB선물지수	280.17	308.94	234.05	220.04	216.63	-3.4 p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

□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E)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	2.3	2.9	3.7	3.0	3.3	3.5	3.6	3.6
	민간소비 (%)	1.9	1.9	2.1	1.5	1.8	3.0	2.6	2.8
	건설투자 (%)	-3.9	5.5	1.8	0.4	1.0	1.8	4.3	3.0
	설비투자 (%)	0.1	-0.8	7.5	4.2	5.8	4.2	6.0	5.1
	지재투자 (%)	8.6	4.4	6.4	2.9	4.6	7.3	7.0	7.1
대외거래	경상수지 (억 달러)	508	812	394	498	892	320	360	680
	무역수지 (억 달러)	283	440	199	273	472	192	234	426
	수 출 (억 달러)	5,479	5,596	2,832	2,895	5,727	2,949	3,074	6,023
	(증가율, %)	(-1.3)	(2.1)	(2.4)	(2.2)	(2.3)	(4.1)	(4.7)	(4.4)
	수 입 (억 달러)	5,196	5,156	2,633	2,622	5,255	2,757	2,840	5,597
	(증가율, %)	(-0.9)	(-0.8)	(2.7)	(1.2)	(1.9)	(4.8)	(5.0)	(4.9)
소비자물가 (평균, %)	2.2	1.3	1.4	1.2	1.3	2.0	1.9	1.9	
15~64세 고용률 (%)	64.2	64.4	65.0	65.7	65.3	66.0	66.5	66.2	

주 : E(Expectation)는 전망치.